

추경호 “임기 단축 개헌 동의 못해”

국힘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하자”

원내대책회의...22대 첫 정기국회서 논의 제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원내회의...나경원 발언 제동 범야권 이슈·개헌론 확산 차단 나경원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28일 당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현재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재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재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향의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택한 국민의 뜻과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가 하루 만에 공개 제동을 건 데는 22대 국회 개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과 맞물려 개헌론이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은 그동안 조국 혁신당 등 범야권이 처음 띄우고 주도해온 이슈라는 점에서 원천 차단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도 풀이된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당내에서도 당 지도부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반응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소셜미디어 글에서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 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나 당선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개헌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를 원론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며 “현 대통령 임기는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이며, 당연히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연합뉴스 kroh@kwangju.co.kr

국민의힘은 28일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편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중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중부세 폐지 등 중부세 개편 의견이 나오자, 이를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중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중부세 폐지론’을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중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

후 20년이 다 돼 가는 지금이야말로 중부세가 지금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 지 재검토할 시기”라며 “그간 중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던 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중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중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았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 폭탄을 받은 납세자들이 폭증했다. 이에 집주인들이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세금 부담을 메우려 했고 결국 ‘뿔뿔한 한 채’, ‘영끌 투자’ 같은 기현상을 낳았다”면서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 프레임에서 보는 걸 탈피해야 비정상적인 과세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진표 “적대적 정치, 민주주의 위기감 커져”

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의회주의의 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대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개원기념식은 제헌 국회가 처음 문을 연 1948년 5월 31일을 기념하는 행사다. 이날 개원기념식에서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살아 숨 쉬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기념사에서 “21대 임기 종료로 하루 앞둔 지금, 적대적 대결 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여의도 브리핑

서삼석,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28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이며, 질적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을 선정한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진작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왔다.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삼석 의원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이하 국토외곽먼섬법)은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부야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서 의원은 이로써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21대 국회 최초로 발의한 ‘인구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선정돼 수상했다. 서 의원의 국토외곽먼섬법은 육지 기준 50km 이상 떨어진 먼섬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2023년 7월 7일 발의했다.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먼섬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국회 입법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제정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을 보완하여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도의회의장협, 5·18 헌법 수록 건의안 채택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7일 순천에서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왜곡

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5·18은 특정 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라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장 광주시의회 의장은 “함께 뜻을 모아준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에게 감사드린다”며 “여야 모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출범하는 제22대 국회는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건의안을 전달해 공식 답변을 기다릴 방침이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활동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